
청사 이전 문제를 다시 거론한 범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 대한 재외동포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.

<경과>

- 4월 1일(월) ‘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’가 기자회견 중 “재외동포청 청사 이전에 대해 외교부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어 불씨가 남아 있다” 고 언급한 후, “대통령이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”는 요구를 발표하였고, 일부 매체에서 이를 인용 보도

<재외동포청의 입장>

- 서울 이전 검토 반대 의사 표명 관련
 - 우리 청은 지난 1월 29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“인천을 떠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”는 내용을 전했습니다.
 - 범시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중 우리 청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서울 이전 검토를 대통령과 외교부가 반대하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주장입니다.
- 공공청사 마련을 위한 인천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
 - 우리 청은 지난 1월 임대료 인상 통보를 계기로 청사 이전 문제를 검토하였으며,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.
 - 임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인천 지역 내 청사 후보지를 물색

하여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인천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으며, 임대료 인상을 수용하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

○ 우리 청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상존합니다.

- 매년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인해 안정적인 정부 행정 수행이 어려워짐
- 재외동포협력센터와의 통합 등에 따른 추가 공간 필요
- 국가 외교안보 보안시설인 재외동포청이 민간 기업 등과 혼재해 취약한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됨

□ 우리 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, 교육문화센터 설치 등 통합적인 동포 행정이 가능한 공공청사 마련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당연히 인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.

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재외동포청 대변인실 | 책임자 | 대변인 | 박병규 | (032-585-3107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민지 | (032-585-3246) |

